李대통령 대일·대북 강경대응 배경

"국론 분열은 일본만 得"… 정략적 이용 쐐기

독도 미온적 대처땐 제2촛불 번질 우려

개성관광 중단 검토 등 北에 강력 경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대일 강경 대응 카드를 제시했다. 당초 1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을 하루 늦춰 16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적, 초당적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방침의 배경과 전망을 조명해본다.

◇**일본 독도 도발**=이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명기'에 대해 초당적 대처를 주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조짐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내부의 국론 분열은 결국 일본에만 득이 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한일 정상 환담에서 후쿠다(福田康夫) 총리가 독도 명기 통보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내부의 분열을 노린 의도적인 리크(언론 흘리기)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독도 괴담'이 횡행하고 있는 한국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 같은 인식은 독도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제2의 촛불로 진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인터넷에 '독도 괴담'이 떠돌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부담감도 없지 않다.

또 이 대통령은 "일본이 장기적, 전략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 하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임기응변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즉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금강산 관광 중단**=이 대통령은 금강산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와 재발방지대책, 확실한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향후 추이를 봐가며 개성관광 중단을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단기적인 대북 관계 경색을 감수하고라도 철저한 대응을 해나간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 모두 막대한 대북 지원을 해왔다"며 면서 "금강산 관광은 북한을 돕겠다는 선의로 가는 것인 데 북한이 비무장 관광객에서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은 정부의 강경 방침을 반영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대북기조 전반의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피력한 '전면적 대화'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큰 원칙의 변화는 없다"면서 "다만 상황변화가 생긴 부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계 두 여성이 독도 지켰다

김하나·김영기씨, 美 의회도서관 공문

'독도→ 리앙쿠르 암' 명칭 변경 막아

캐나다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여성 두 명이 독도를 지켜냈다.

미국 워싱턴의 의회도서관이 장서 분류·관리의 기본이 되는 주제어 가운데 현행 '독도(Tok Island)'를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로 바꾸려했으나, 한국계 여성 두 명이 발빠른 대응으로 의회도서관의 명칭 변경을 보류시킨 것이다.

독도의 '리앙쿠르 암'이라는 별칭은 1894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기에 앞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국제사회에 퍼트린 용어다.

북미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 한국자료분과위원회의 김하나(여) 회장은 미국 의회도서관이 북미지역 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주제어(SACO) 편집회의를 16일(미국시간) 열고 독도를 리앙쿠르 암으로 바꾸는 문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런 내용을 조지워싱턴대학 동아시아어문학과장인 김영기(여) 교수에게 긴급히 알렸다. 이후 김 회장과 김 교수는 긴밀한 공조로 미국 내 한인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김하나 회장

김영기 교수

특히 김 회장은 북미 동아시아도서관 협회 한국분과위원회 이름의 공문을 의회도서관에 보내 "이 문제가 한·일간의 영토분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의 호소에 공감한 의회도서관은 이날 "앞으로 미국 지명위원회나 국제지명관계위원회에서 한·일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제어 변경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김 회장은 "미국 내에서 리앙쿠르 암을 포괄하는 더 큰 개념의 주제어로 'Islands of the Sea of Japan(일본해의 섬들)'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는 독도가 일본해에 포함돼 있는 일본 군도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

■ **정치권 대일 강경 모드 계속**

한나라 "대마도도 우리 땅" 주장

민주 "독도 보전법 제정 추진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에 대해 정치권의 대일 강경 모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16일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까지 나왔고 민주당은 독도보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친박계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상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도 고질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대응하는 것도 의미있는 주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독도 주장 논거보다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논거와 역사적인 고증 자료가 많다"며 "이승만 대통령 때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일본보다 우리나라와 더 가깝고 혈통을 보면 일본 당국이 B형 간염 유전자 물질을 추출해보니, 유전 물질로 AYW등 4가지의 단백질이 발견됐는데 한국 사람의 경우 100%가 ADR이다. 그러나 일본은 (ADR과) 다른 물질과의 비율이 7대 3정도 되지만 대마도 주민들의 혈통은 ADR이 거의 100%"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6일 "말로만 대응해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영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독도보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몇 년간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하는 작업을 보면 지속적이고 치밀·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점부터 찍고 선으로 연결하고 다시 면으로 만드는 치밀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를 겨냥, "무원칙한 임기응변 외교" "과거 부정의 근시안 외교"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와 남북관계를 잘못하고 있지만 정말 외교는 빵점"이라며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 대중국 관계, 한일관계 등 어느 하나 성공외교를 추진하는 기색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실용외교가 아니라 무원칙과 임기응변의 외교"라며 "이 대통령이 지난 10년을 부인하면서 원칙 없이 임기응변 외교를 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가간 외교문제는 어느 나라든 실익에 기초해 외교전략을 짜는 데 이 대통령의 정부에는 외교전략이 없다고 혹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日, 러일戰 승리위해 독도 강탈"

시마네대학 나이토 교수

일본 학자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지적한 논문이 국내 한 대학의 학술지에 실려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독도연구'4집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대학의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79) 명예교수는 자신의 최신 논문에서 "독도는 러·일전쟁(1904~1905) 당시 일본이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나이토 교수는 논문에서 일본 외무성이 지난 2월 출판한 팸플릿인 '다케시마-다케시마 문제의 이해를 위한 10가지 포인트'와 관련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논박했다.

특히 그는 일본 정부가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다케시마 영유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항목과 관련해 1905년 당시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이던 야마자 엔지로(山座圓次郎) 발언을 근거로 일본이 러일전쟁 승리를 위해 독도를 강탈했다고 밝혔다.

그의 논문 따르면 당시 야마자 정무국장은 "시국이 영토 편입을 급히 요구한다. 망루를 세우고, 무선 혹은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의 감시상 대단히 요긴하게 되지 않을까, 특히 외교상 내무(內務)와 같은 고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